

# 현장소통형 심사를 통한 특허품질제고

- 점·접착소재분야 특허경쟁력 -

2016. 3.31.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과장 반응병



# 목차

## 1. 특허(심사)품질

- 현장소통형 심사, 공중심사

## 2. 소재산업의 특허경쟁력

## 3. 개정 특허제도 소개



## 비전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목표 :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 2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쟁송제도 개선
- 3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구축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 1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 2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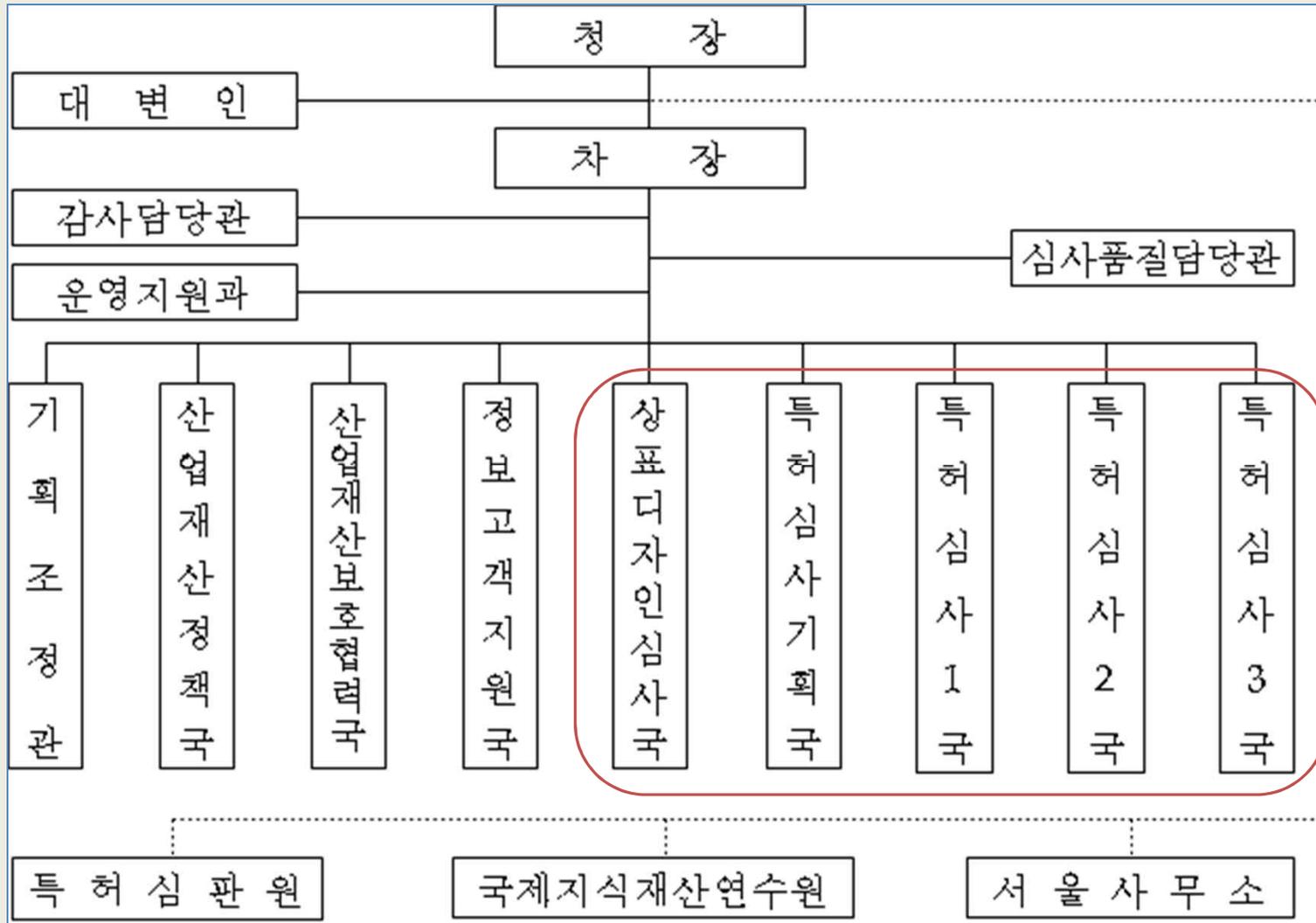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 특허청 (심사관) 900명/총1,600명





# 심사관 - 기술분야 (7만개)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그룹 합계
A	16	84	1,106	7,492	8,598
B	37	168	1,985	14,873	16,858
C	21	87	1,321	13,155	14,476
D	9	39	350	2,700	3,050
E	8	31	323	3,034	3,357
F	18	97	1,064	7,487	8,551
G	14	81	696	7,337	8,033
H	6	51	546	7,968	8,514
Total	129	638	7,391	64,046	71,437

특허분류체계	사용국	언어	코드 수	코드 형태	적용 문헌
IPC	IPC Union, WIPO	영어, 불어	7만개	숫자	전세계 대부분 특허문헌
ECLA	EPO	영어	14만개	IPC+알파벳, 숫자	영어, 불어, 독어로 된 PCT 최소문헌 및 다수의 비특허문헌
USPC	USPTO	영어	16만개	숫자 (IPC와 상이)	미국 특허문헌
FI	JPO	일어, 영어	19만개	IPC+알파벳, 숫자	일본 특허문헌
CPC	EPO, USPTO	영어	26만개	IPC+숫자	영어, 불어, 독어로 된 PCT 최소문헌 및 다수의 비특허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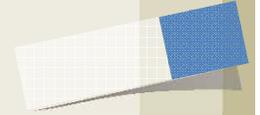
# 통계로 본 특허경쟁력(1)

- 산재권 출원 세계 4위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12)
-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 및 심사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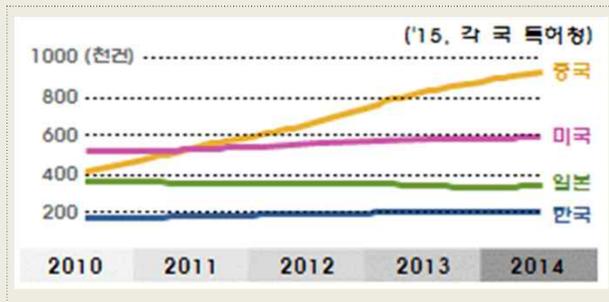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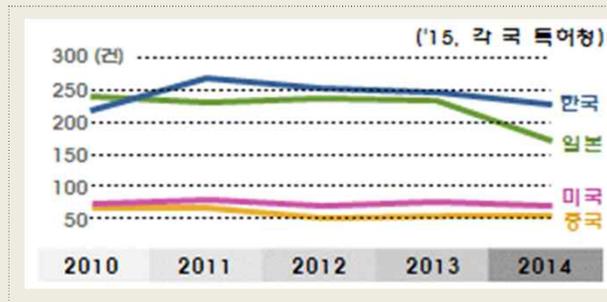
# 통계로 본 특허경쟁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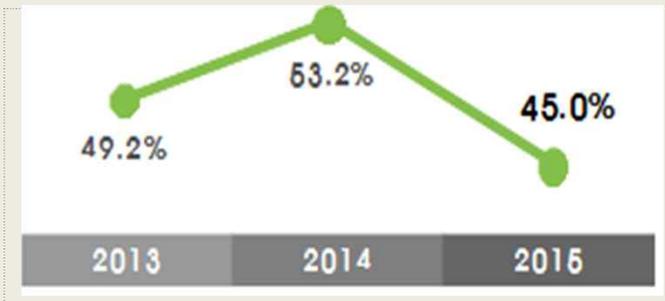
### <주요국 특허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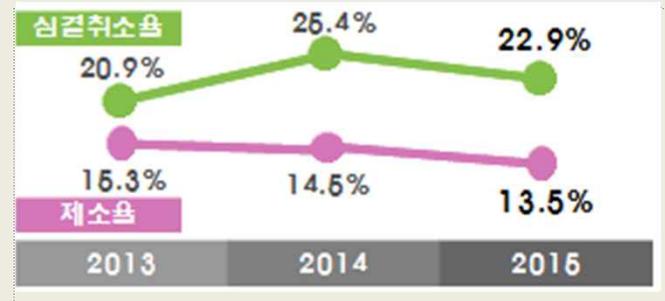
###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처리건수>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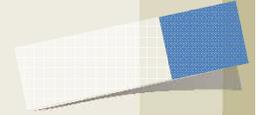


### <심결취소소송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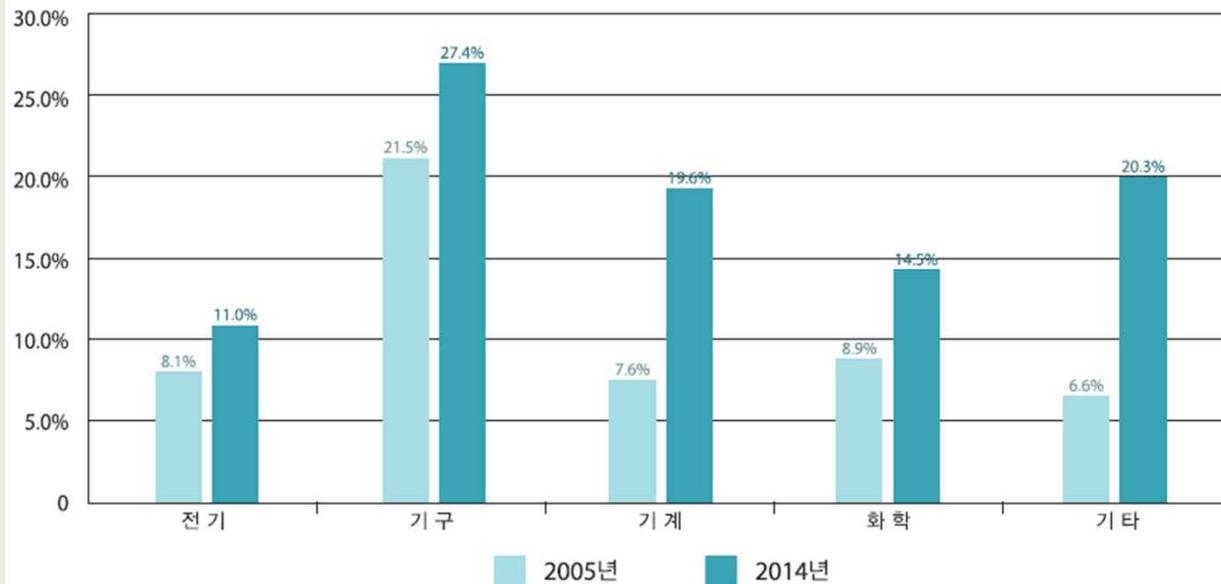
# 통계로 본 특허경쟁력(3)



## 기술분야별 특허동향(기술의 융복합 비율, 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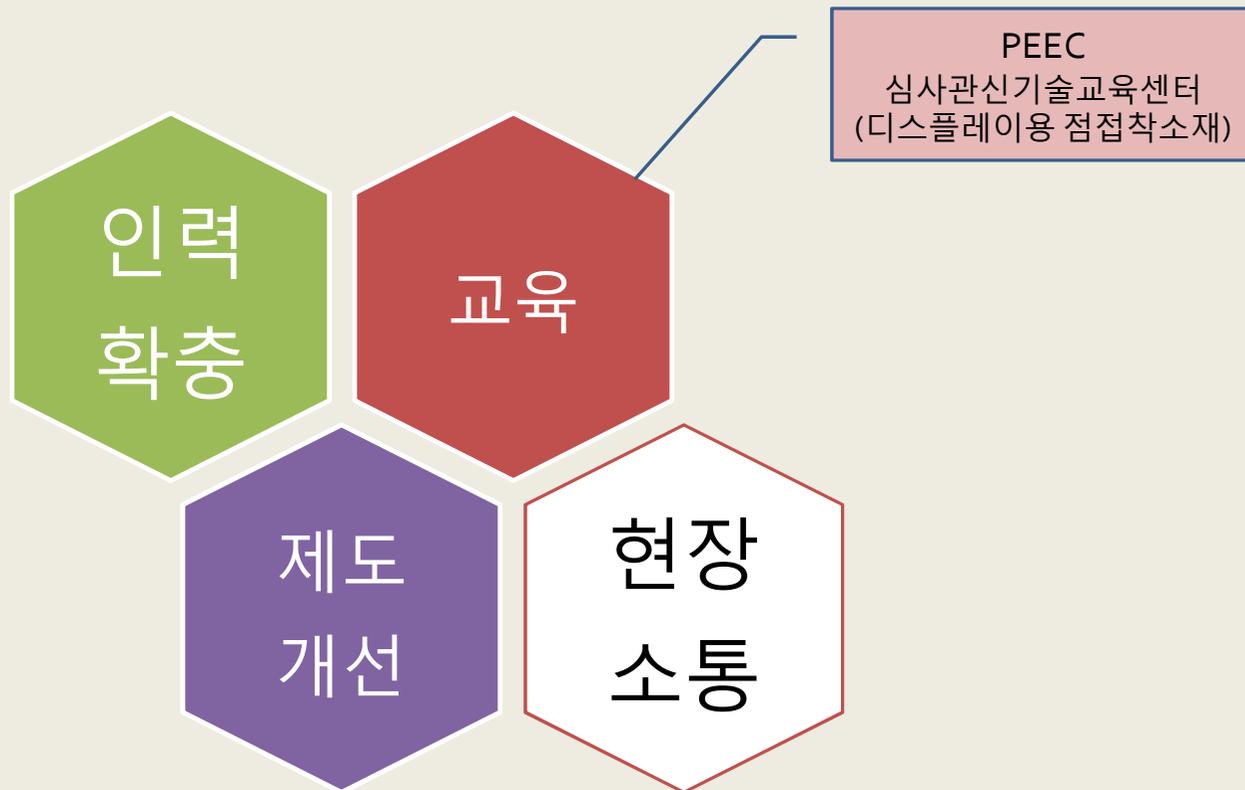
- 산업에 필요한 기술의 요구가 다양화해지면서 특허에서도 지난 10년간 기존의 전기분야 일변도에서 기계와 화학기술 분야의 점유율 증가가 목격되었다.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전기 분야의 둔화세와 타 기술 분야의 확장세로 기술의 복잡화 및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업발전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화** 진행됨에 따라 5대 기술분야간 융합 비율도 2005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4년 융합 비율이 가장 크게 변한 분야는 기타, 기계, 기구 순으로 전기와 화학에 비해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있는 분야에서 융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 5대 기술별 융합비율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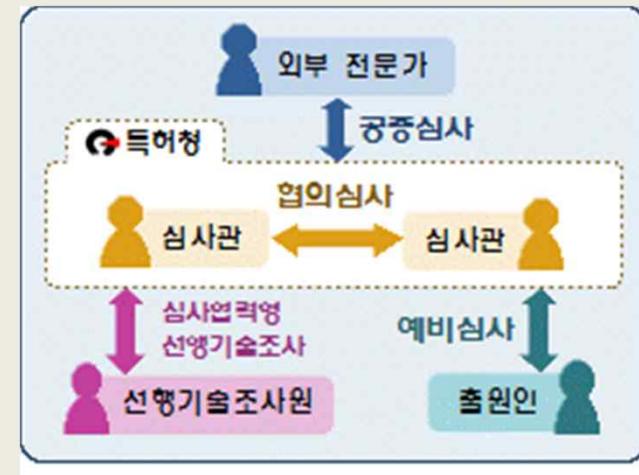
# 품질 중심의 심사서비스 제공





# 현장 소통형 심사

-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 심사 추진**
-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하여 특허고객과의 소통 강화
-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달리 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확대하여 심사의 정확성 제고





2016년 특허청 업무 계획

특허청이 현장소통 강화로 특허 심사 품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환용될 수 있도록 무효심판 제도도 개선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 열린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심사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심사품질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소통 강화, 심사 품질 높인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관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기술자료를 물론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중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상표 등 분야별로 공동으로 출원권을 검토하는 협의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다.

기존에 미국의 특허청과 진행했던 특허 공동심사(CSP)를 올해는 중국, 일본 등에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최동규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심사 업그레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 심사관 직접 방문 검토...中·日과 공동심사 추진 소 무효증거 심판 단계부터 제출...쟁송제도 개선 IP 기반 中企 적극 육성·금융지원도 수준 높여

예비심사도 확대된다.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특허쟁송 제도도 정비한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부터 제출하도록 기존 무효심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특허심판의 다음 단계인 특허법원에만 제출하면서 심판원의 결정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2014년에 특허심판원의 유효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은 68.8%에 이르며 이중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뒤집힌 비율은 70.3%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심판단계부터 피의자를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결정을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허청은 일반 국민들이 특허심판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미룰 수 있는 절차중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허심판과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당사자들은 특허심판원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의 결과를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송절차 중지 역시 법원 직권으로만 가능해 소송절차 지연에 부담을 느낀 법원은 중지 제도 아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

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IP)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정을 거쳐 개발된 기술을 선별해 우수기술만을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리스터 등과 연계해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뿌리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제약산업 등으로 IP·R&D 연계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제품, 정밀기기부품 등 대일본 적자 폭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는 대체기술과 IP개발을 지원한다. 유망 뿌리기업에는 우수공정 특허권리화를, 제약산업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IP포트폴리오 강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된다.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이 확보되도록 IP금융지원 금액을 지난해 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중 은행 등이 IP보증과 담보대출에 투자를 결정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남 브리핑은 소셜 브리핑을 표방하며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유튜브로 생중계대 논감을 끌었다. 브리핑을 시청한 유튜브 접속자수는 3,214명으로 집계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 공중심사, 당신도 이제 특허심사관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 시, 해당 출원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그룹이 개진한 의견을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특허전문가 그룹 심사자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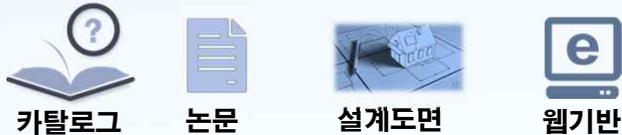


# 제도의 의의

## 품질 향상을 위한 공중심사 강화

- 방대한 양의 선행기술문헌과 기술의 융·복합화로 심사 어려움 가중  
 → 특허청 내부 검색DB 탑재 문헌수 6400만건(2014)

### ■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의견 필요



공개 전 특허결정 비율

→ 최근 공개 없이 특허결정 되는 경우가 급증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비특허문헌)에 의해 무효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공중심사 활성화 움직임(미국)

- 공공 열린심사 시스템 구축 및 민간 열린심사 활동 매우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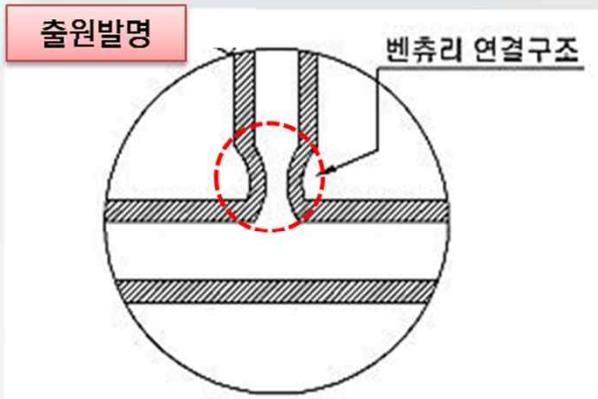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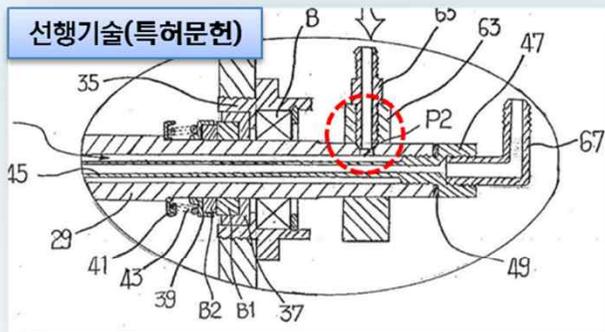


- NPEs 급증, BM, IT 특허소송 증가 특허품질(Gold Plated Patent) 증시  
 → 열린(공중)심사 강화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발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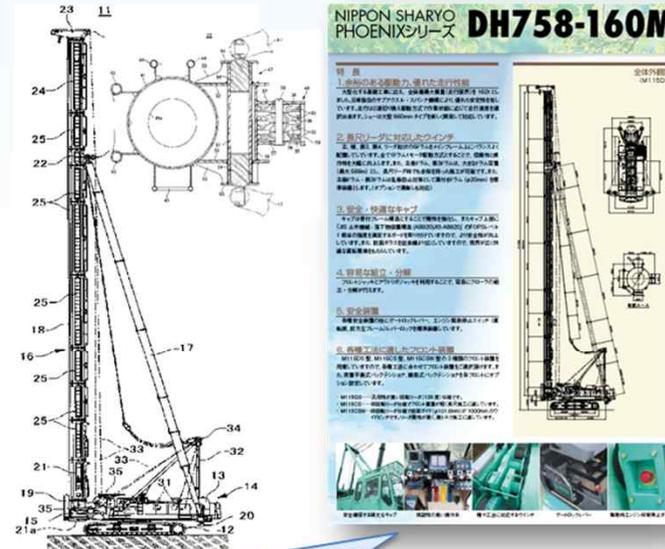
## 제공된 「비특허문헌」 을 특허심사에 활용한 사례

### 1. 산업현장 기술정보(설계도면)로 특허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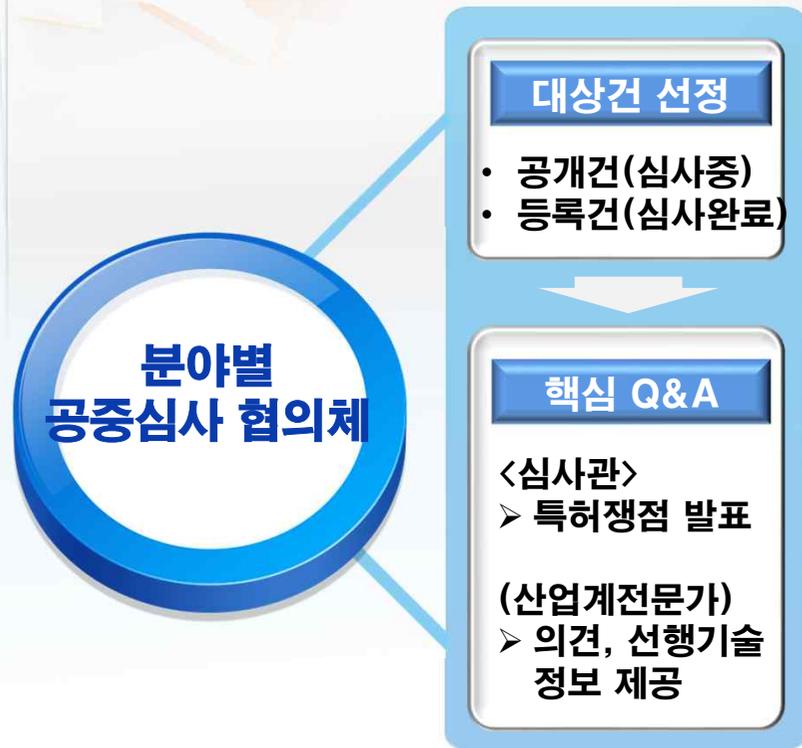
산업현장 설계도면에 있는 너무 간단한 기술특징은 특허문헌으로 검색 곤란

### 2. 제3자 정보제공(카탈로그)으로 특허 불허



복잡한 기술 특징을 제품 카탈로그에서 간단하게 확인

## ● (오프라인) 공중심사 협의체



## ● 소셜네트워크(SNS) 방식

핵심 특허쟁점 Q&A 글 올리기 (공유)

## 특허심사행정

### 특허품질 향상 및 개방형 특허행정 촉진



- 특허 무효 가능성 조기 차단
- 특허 부여기준 조화 :  
산업계와 심사관 견해차 해소
- 심사행정 진입장벽 완화

## 산업계

### 인센티브 획득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



- 인센티브 :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 시장대응 : 핵심특허 트렌드  
지속적 관찰
- ➡ 분쟁이나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조기대응

## 산학연 전문가

➤ 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현장 기술정보의 심사활용 가능성이 많은 분야

의견제시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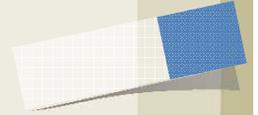
문헌제시

논문, 설계도면,  
카탈로그, 특허  
공보 등

심사에 반영



# (점·접착)소재



전자신문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004면 종합

## “한국소재이니셔티브로 ‘미래 신시장 주도권’ 선점하라”

정부는 첨단·제조업 핵심인 소재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소재이니셔티브(Korea Materials Initiative)’를 마련한다.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해 수요-인프라-개발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소재산업은 경제 성장 기여율과 무역수지 흑자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으로 떠오른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자문회의는 소재기술 혁신 방안으로 △미래산업 선점과 신산업 창출 위한 소재기술 개발 △개발 소요기간 50% 단축 위한 소재공정 혁신 △지속적 혁신 가능한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출연연 기술이전을 연계해 중소기업 주도로 ‘한계돌파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신흥산업 선점 위해 수요 대기업이 견인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길목 지키기형 소재 개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소재 중요성이 큰 이머징산업을 선정해 기술(수요)-인프라-개발주체를 통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분확실성은 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원천소재 개발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 씨앗 뿌리기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소재 유형·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창의 아이디어를 집중 육성할 것도 건의했다.

빠른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해 첨단 IT와 소재 설계기술을 융합, 소재 개발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핵심 전략소재별로 특화된 ‘계산재료과학 플랫폼’과 실험 결과와 전산해석 데이터를 축적한 ‘소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재 관련 정부연구개발 중 공정 비중을 현 7%에서 2017년 15%까지 확대할 것을 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했다. 지속가능한 소재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도 제안했다. 시장의 소재 다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 기업지원 전담 ‘소재개발 코디네이터’ 지정, ‘플래그십 프로젝트’ 조기 착수와 중견·중소기업 참여 비율 확대 등으로 소재 혁신 중심이 중소·중견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기업 소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평가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소재 표준·인증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소재 대일무역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소재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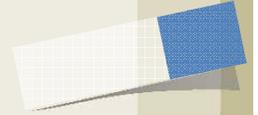
“중국 등 신흥국 추격 위협 속에서 지속적인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혁신소재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날 국내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과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성 강화방안’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소재 & 응용



## 종이(소재)와 인쇄술(응용)

- 소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최종제품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역사적인 발명으로 종이보다는 인쇄술을 꼽는 사람이 많음
- 인쇄술의 현란한 발전에 비해 종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예전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21세기는 소재가 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

- 개발이 어렵지만 성공할 경우 장기간의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
- 공급기업(소재)-수요기업(응용제품)간의 상생이 중요
- 혁신적인 소재로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



# OLED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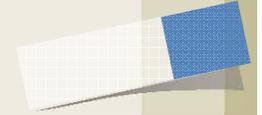
## OLED 소재기술은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기술선점 및 가속화 요인

- 소재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OLED 주요 기종(TV, 휴대폰, 태블릿 등)마다 채택되는 소재가 바뀌고 있음. 새로운 **후발기업**들이 등장하고 **소재 채택 사이클**도 짧아짐. 기업별 소재 **국산화**에 총력
- **특히 확보**가 되었을 때만 패널업체에서 소재를 수용.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패널 분석을 통해 **소재를 카피**하거나 **회피설계**하기 용이함
- 선두업체(예를 들면, 이데미쓰 고산)의 **광범위한 특허 선점**으로 후발업체의 소재 시장 진출 어려움
- OLED 패널은 다수의 유기물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유기물층을 구성하는 다수의 소재(8~15종)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소재의 조합이 중요**하고, **패널 제작 장비 의존도가 높아**, 소재의 개발 단계부터 패널업체와 소재업체간 긴밀한 협력 필요
- 지금까지의 소재 산업은 최종 수요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자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위상이 달라짐. 단순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사가 아니라,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협력하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 발전

## 소재(원료)업체 : 패널업체 : 제품(세트)업체간 특이한 가치사슬 형성



# 침해유형 (특히, 조성성분)



구분	특허발명	실시주장발명	판례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특매를 이용한 화학발명



# 기술노하우나 영업비밀

파이낸셜  
뉴스

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031면 사설 /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 기술 유출, 中企엔 치명타

지난 13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제5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4700여개에 이르며 이들의 피해금액도 2013년 기준으로 1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심각한 기술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직 국가정보기관원 A씨에게 들은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인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한다.

정밀기계부품을 생산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납품하는 이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이 부족하자 몇 년 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했다. 이 중소기업은 정밀기계부품 분야에서는 세계 1~2등을 다투는 알짜 기업이였다. 당시 입사한 근로자 가운데 2명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웬만큼 한국어를 구사했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일하면서 기존 직원들과도 친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을 포함한 몇 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그 회사 사장은 이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잡적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윤 휘 종  
산업2부장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약 1년 후 발생했다. 해외 바이어들이 부품 구매처를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외국에서 이 중소기업과 유사한 기술에 훨씬 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쟁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보유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거나 거창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정도로 복잡한 기술은 아니었다. 그저 이 회사 사장이 수십년간 선반 일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전부였다.

당시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국내외를 오가며 입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도망쳤던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 회사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아냈다. 그 외국인은 현지 유력 기업인의 아들이었고, 이 회사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마치 '007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A씨는 그 내용을 해당 기업 사장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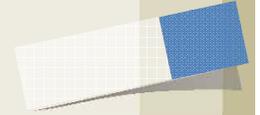
통보했지만 외국인 고용서류도 없어진 데다 외국 기업과 소송하는 것에 비용부담을 느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아마 지금도 자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기업이 수도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사의 기술노하우나 영업비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경쟁사들이 자사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유사 제품을 내놓을 경우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중소기업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어 폐업했다고 한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생명인 시대가 됐다. 지식재산에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 같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사소한 공정개선 노하우부터 거래처 관리, 판매기법 등 다양하다.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민형사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소송할 시간과 인력이 없다면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자사의 지식재산인지 파악한 뒤 '지식재산이 유출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각오로 지식재산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

yhj@fnnews.com



# 최근 기업의 특허전략(예)



전자신문

2015년 05월 15일 금요일 005면 종합

## 매입·M&A→기술 접목→자체 등록

### 애플, 특허 장벽 어떻게 쌓나

애플 특허 활동에는 미래 비즈니스가 녹아 있다. 미래기술 선점을 목표로 특허 매입·등록·인용 네트워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이 특허 등록을 크게 늘린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다. 특허 등록이 급증하기 1~2년 전에 대량 특허 매입이나 기업 인수합병(M&A)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애플은 매입을 통해 핵심 특허를 확보한 후 자체 등록을 크게 늘려 높은 진입 장벽을 쌓는다.

애플 전략은 터치패널 부문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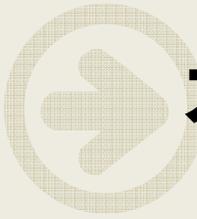
애플은 2005년 터치패널 전문기업 '핑거웍스'를 인수했다. 핑거웍스가 보유한 터치패널 기술은 곧바로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에 적용됐다. 외부 특허 매입을 통해 자체 기술혁신에 성공한 것이다.

터치패널 기술 접목에 성공한 애플은 이후 자체

등록을 크게 늘렸다. 2007년까지 5건에 그쳤던 터치패널 특허 등록이 2008년부터는 200여건으로 급증했다. 대신 2008년 이후 터치패널 관련 특허 매입은 크게 줄었다. 자체 기술 개발 시기로 넘어간 것이다.

터치패널 특허 등록 급증과 함께 애플의 자체인용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애플은 보유 터치패널 특허를 총 2970회 자체 인용했다. 이 가운데 2630번 자체인용이 2011년 이후에 집중됐다. 애플이 터치패널 기술개발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기술을 사들인 후 관련 특허를 집중 등록하는 애플 전략은 '시리'와 '오센텍' 인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0년 인수한 시리 기술은 2011년 출시된 아이폰4에, 2012년에 사들인 오센텍 기술은 2013년 출시된 아이폰5에 탑재됐다. 이후 애플은 음성인식과 지문인식 관련 특허 등록을 빠르게 늘렸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 점·접착소재산업, 특히 전략은?

- 디스플레이용 점·접착제의 개발은 기재의 종류가 다양하며 전처리에 따라 표면 성질이 달라지고 또한 다양한 공정 조건으로 인해 그 공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 사용자와 개발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





# 주요 개정 특허법, 제도(1)

##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건 명확화

- 청구범위 기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언어요건 명확화

- 특허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는 국어로만 기재하여야 하나 국어 이외에 외국어(영어)로도 명세서 기재 가능. 단 일정기간이내 국어번역문 제출필요
- 연구노트나 논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출원할 수 있음

## 포지티브 심사 활성화

- 등록받을 수 있는 보정방향 제시
- 예비심사 대상 확대/일괄심사(2이상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 주요 개정 특허법, 제도(2)

###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검토

### 공지에외주장 보완에 따른 요건 기준 개정

- '15. 7. 29자 이후의 출원은 출원이후에도 공지에외 주장을 보완할 수 있음

### 심사청구기간 단축

-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